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2024. 11. 21. 목 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방송  YouTube 생중계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2024. 11. 21. | 목 | 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2024. 11. 21. | 목 | 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진행순서 PROGRAM

개회식 9:30~9:50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장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이학영 국회부의장·국회노동포럼 대표
	김정재 국회의원·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김종민 국회의원·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

발제 및 토론 9:50~12:00

사회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1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 2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좌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석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2024. 11. 21. | 목 | 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목차 CONTENTS

개 회 사	국회미래연구원장	7
환 영 사	우 원 식 국회의원	9
축 사	이 학 영 국회부의장·국회노동포럼 대표	11
	김 정 재 국회의원·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13
	김 종 민 국회의원·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	15
발 제 1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	
	이 철 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1
발 제 2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최 영 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5
총 합 토 론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토 론	정 영 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69
	윤 석 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	73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7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1
	홍 일 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85

국회미래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구전환포럼과 함께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큰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 보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김정재 국회의원님, 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 김종민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님,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자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인 23만명으로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도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약 5천만 명에서 2072년에 3천 6백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소사회에 와 있습니다.

축소사회는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 소비 감소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활력과 경제 규모까지 줄어들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더 선명하게 다가올 미래, 축소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급속한 변화는 인구구조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라는 이른바 삼중전환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데 적잖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릴지 그렇지 못할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두 분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께서 인구변화로 인해 지역별 노동수급이 불균형해지는 현상에 대해 2042년까지의 전망과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님께서 삼중전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삼중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요인들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국회의 전문가들께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대응에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과 입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앞으로 다가올 축소사회와 삼중전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오늘 세미나가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리하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 대응 전략들을 도출해 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정책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의장 우원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인구, 디지털, 녹색 전환을 일컫는 ‘삼중전환’과 축소사회 현상 속, 노동·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오늘의 정책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전환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디지털경제 3.0 포럼 등 국회에서 관련된 포럼을 이끌어가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히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22대 국회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기후·에너지 위기, 민생의 위기 등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고질적인 구조적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가중되는 한편, 디지털전환과 기술융합 같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복지 생태계의 혼란이 심각합니다. 축소사회 현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인구 등의 요인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통계 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중요한 전환기가 '위기'가 아닌 '기회'이길 바랍니다.

공적 주체들의 책임있는 자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역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의제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 각오와 의지를 담아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이번 국회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정책 세미나의 개최가 더욱 뜻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기보다, 각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담아 책임있는 노동·복지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국회와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대한민국이 마주한 축소사회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삼중전환 각 분야에 맞춘 입법 및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시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가 아닌 기회의 시대를 새롭게 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국회의장 우 원 식



국회부의장·국회노동포럼 대표 이 학 영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 복지 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미래연구원 박명광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는 ‘축소 사회’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점차 커졌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의 개선,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와 고용 유형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책세미나에서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노동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부의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법안 및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국회부의장 **이 학 영**



국회의원·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김 정 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에 도달했습니다. 6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지 20여 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돌고, 전체 인구의 1/5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 소비 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축소사회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의 극심한 저출생과 초고령화는 우리나라가 그다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 게다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축소사회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는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지는 제도와 정책이 잘 작동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인구구조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일컫는 삼중전환은 난제이기도 하지만 축소사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산업이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일자리 증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축소사회에 적합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 말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흔히들 국회의 미래는 4년 뒤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4년 뒤 2028년, 대한민국이 저출생·축소사회의 위협을 딛고, 삼중전환의 파고를 건디어, GDP 세계 9위의 위용을 떨치는 데에, 국회미래연구원이 마련한 이 자리가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국회의원 김 정 재



국회의원·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 **김 종 민**

디지털 경제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들이 비즈니스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전통적인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글로벌 등 삼중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신기술, 신산업, 신노동 전략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격차와 기술 접근성의 차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층, 저소득층,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와 연계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혁신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변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금을 통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경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기금 조성을 통한 개인 데이터 지분 배당 등 새로운 디지털 대안경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마련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축소사회와 삼중전환이라는 거대한 사회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맞춰 어떻게 복지 국가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국회의원 김 종 민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발제 1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

이 철 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 2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최 영 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발 제 1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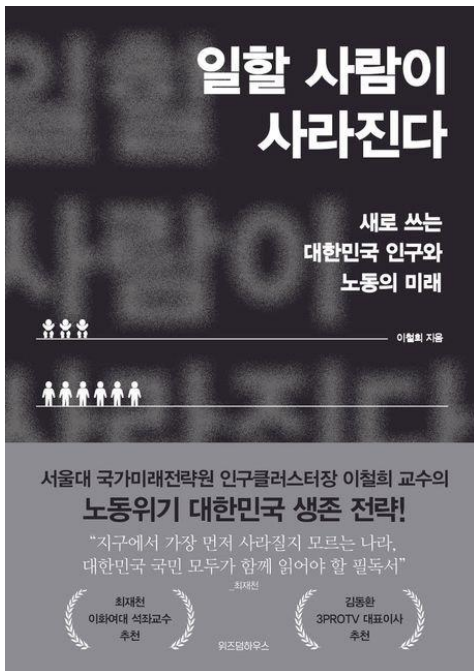
이 철 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정책 과제 정책세미나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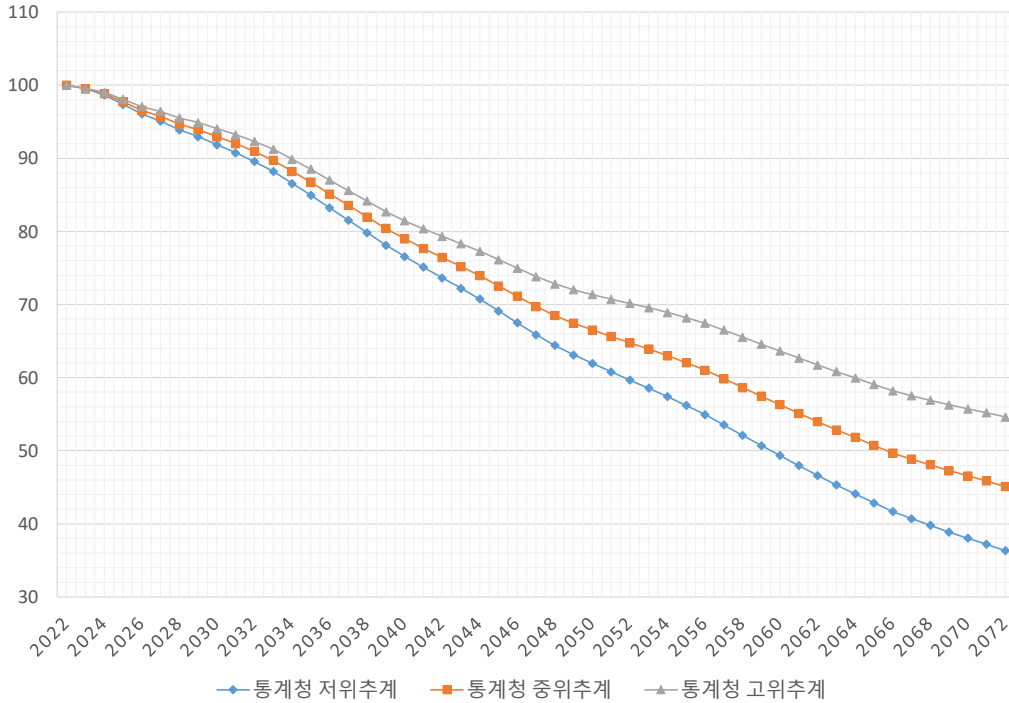
2024년 11월 21일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전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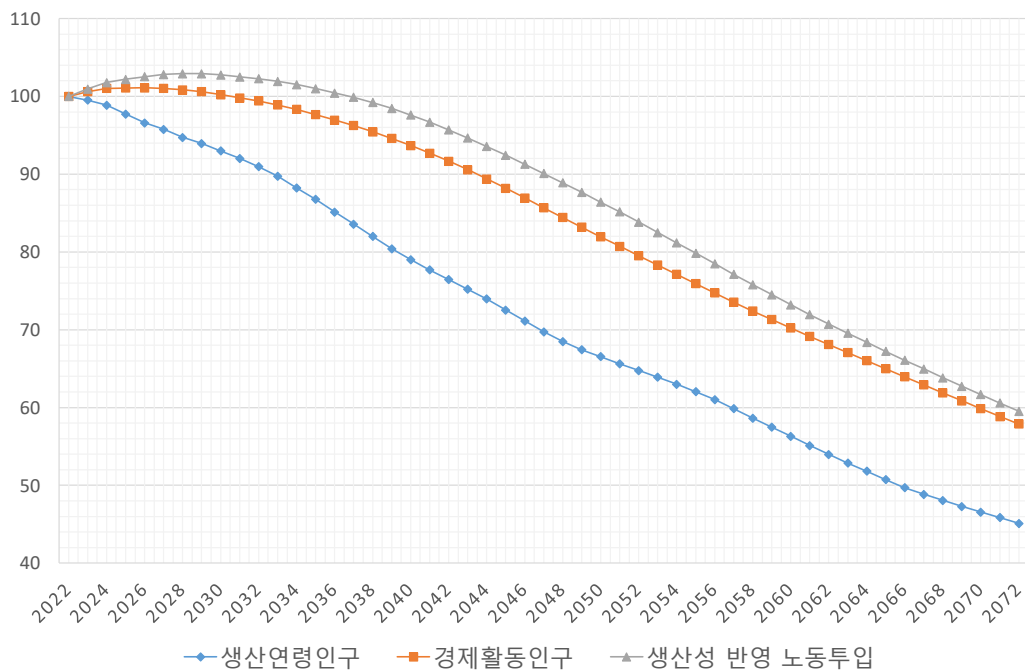
- 1장 안개 속에 싸인, 가리어진 길
- 2장 인구변화는 노동인구절벽으로 이어질까?
- 3장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 4장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까?
- 5장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
- 6장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
- 7장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
- 8장 '이민자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일까?
- 9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2022-2072년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계**
중위: 2042년 76.4%, 2072년 45.1%



**장래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변화 추계결과 비교 (중위추계 기준, 2022=100)**

2047년 생산연령인구 69.7; 경제활동인구 85.7;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90.1
2072년 생산연령인구 45.1; 경제활동인구 57.9;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59.5



시뮬레이션 (1)

- 2022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이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함.
 -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한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노동투입 변화를 추정.
- 2047년까지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047년과 2072년의 노동인구규모 지표 추정.

1. 여성 경제활동 증가

- 시나리오: 25~54세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2022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2. 장년인구 경제활동 증가

- 시나리오: 50~64세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22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시뮬레이션 (2)

3. 장년인구 생산성 증가

- 인적 자본 및 건강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변화에 의해 연령 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 완화 가정.
 - 시나리오: 각 학력별로 임금이 고점에 도달한 이후 연령 증가에 따른 임금 감소폭이 절반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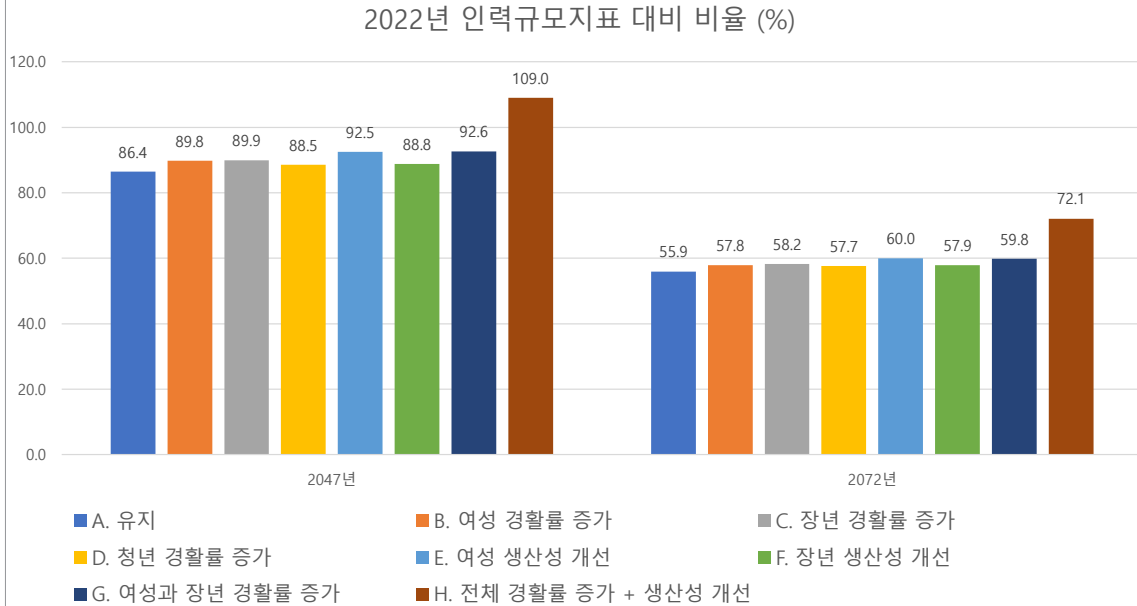
4.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 개선

-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 감소하여 상대적인 생산성 개선
 - 시나리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생산성)이 2022년 OECD 국가 평균으로 상승.

5. 청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 졸업 및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가정.
 - 시나리오: 20~3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2022년) 일본 수준으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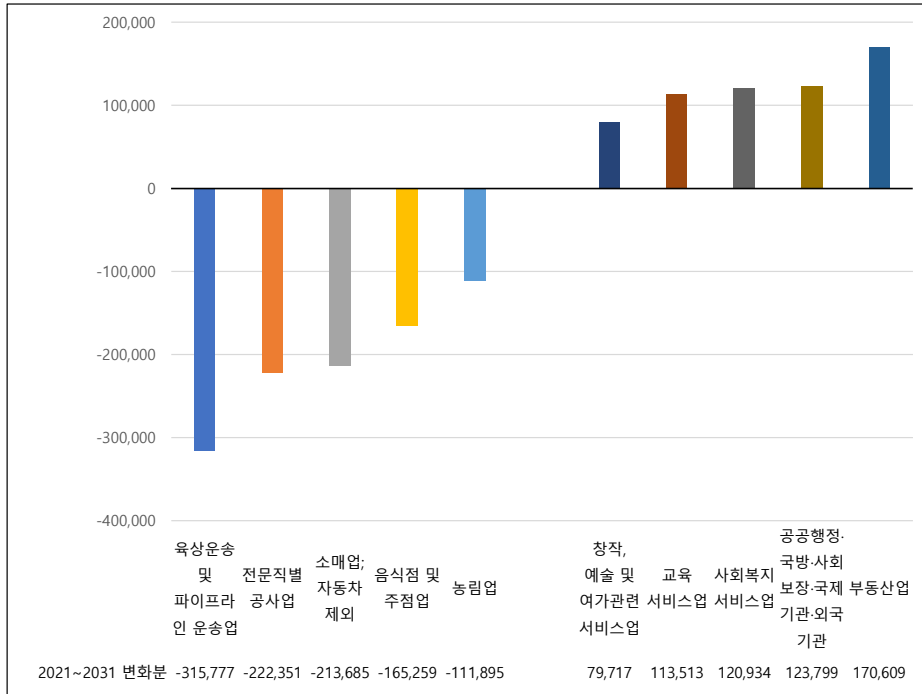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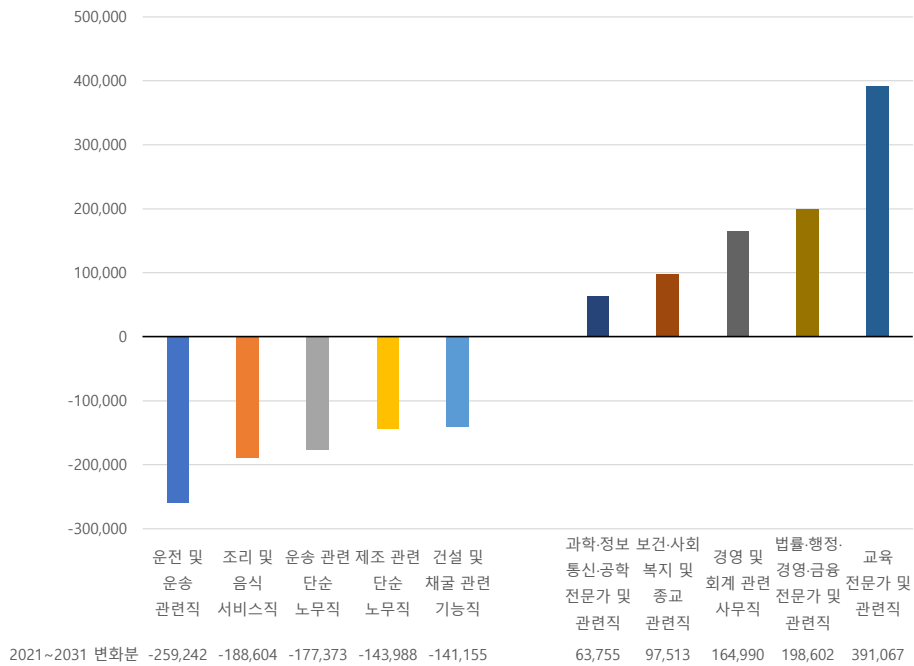
장래 총량적인 노동투입 변화 전망

- 인구변화에 의해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생산연령인구보다 훨씬 느리게 감소.
 - 한국의 장년 및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인력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 장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 장래 노동투입은 더 느리게 감소.
- 기술변화로 노동수요 감소 가능성.
-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적어도 20년간 노동투입은 천천히 감소하고,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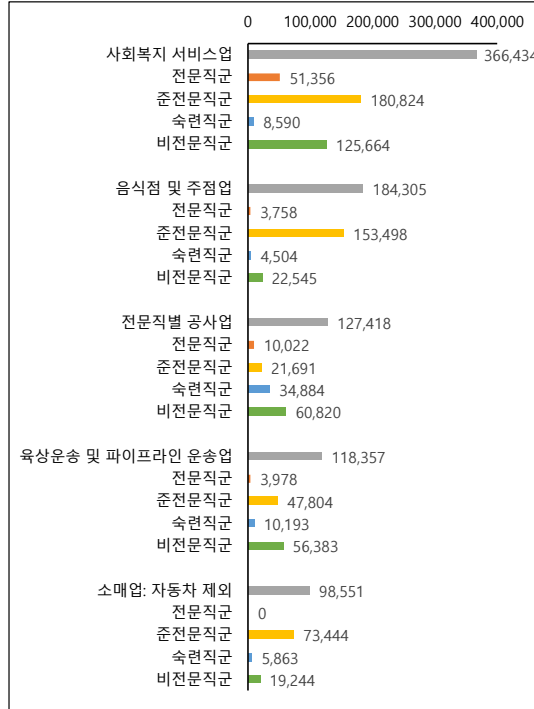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상위 및 하위 5개 산업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직업별 노동공급 변화: 상위 및 하위 5개 직업



2021~2031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 부족 규모: 상위 5개 산업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확대와 그 영향

- 인구변화는 산업/기술 변화와 결합하여 산업 및 직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각 산업 및 직종 내에서도 학력(숙련수준) 간, 연령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
-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하지 않아도 산업, 직종, 숙련 수준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 → 만약 교육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훈련의 부재가 유지되고, 부문 간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질 것.**

지역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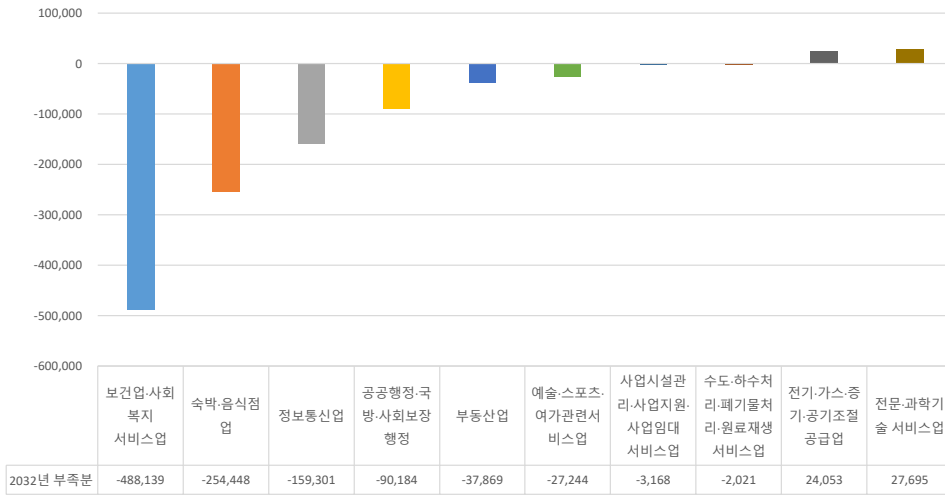


시도 및 대분류 산업별 노동수급 전망

이철희·엄상민(2024)

- 2022년~2032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로 인한 각 지역(광역시도)의 산업·학력별 노동공급의 변화와 기술 및 산업 변화를 반영한 산업·학력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전망.
-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결합하여, 지역 및 산업별 노동수급 변화를 전망함.
 - 2027년과 2032년 시점에 대해 각 시도의 산업 및 학력별 노동인력 수급 불균형(인력 부족 혹은 초과) 규모를 추정함.
 - 지역, 산업, 학력 간 이동성이 없는 경우 지역 및 산업별 노동부족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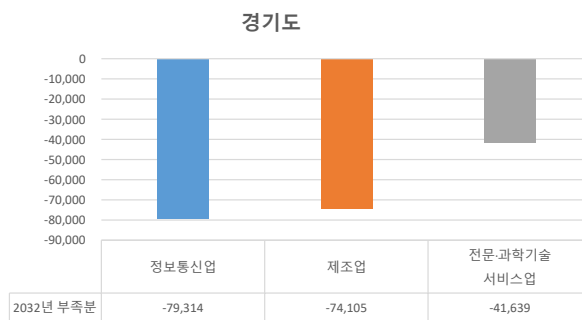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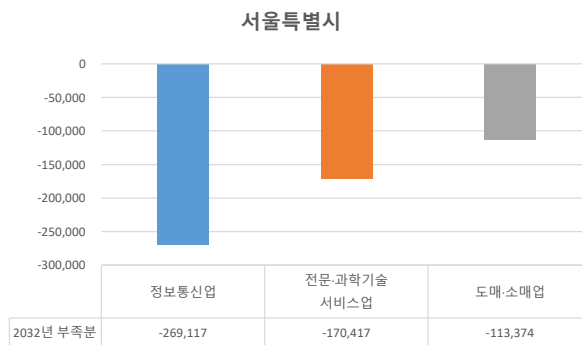
2022~2032년 산업별 노동인력 부족분(공급-수요):
전체, 부족분 규모 최대 10개 산업



시도 및 산업별 분석 주요 결과 (1)

- 전체적으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약 49만 명 부족), 숙박 및 음식점업(약 25만 명 부족), 정보통신업(약 16만 명 부족)에서 큰 규모의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 전망.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
 - 이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임을 보여줌.
 - 이 부문은 전국 및 지역별로 노동공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대규모 노동부족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
-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부산,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
 - 이 지역은 해당 산업 노동공급 감소 규모가 매우 컸던 지역임: 부산(-56.7%), 광주(-46.9%), 강원(-56.0%), 경남(-42.2%), 제주(-60.9%).

2032년 서울과 경기 인력 부족분 : 상위 3개 산업



시도 및 산업별 분석 주요 결과 (2)

- 정보통신업의 노동인력 부족은 수도권에 집중.
 - 서울(약 27만 명 부족), 경기(약 8만 명 부족) 등 두 지역에서 2032년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산업.
 - 이 부문 노동인력 부족은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 모두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서울은 2032년까지 이 산업 노동공급이 약 18만 명 감소. 경기는 약 25,000명 감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결과도 수도권의 첨단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냄.
 - 서울(약 17만 명 부족)과 경기(약 42,000명)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었음.

2032년 동남권 지역 부족분 : 상위 3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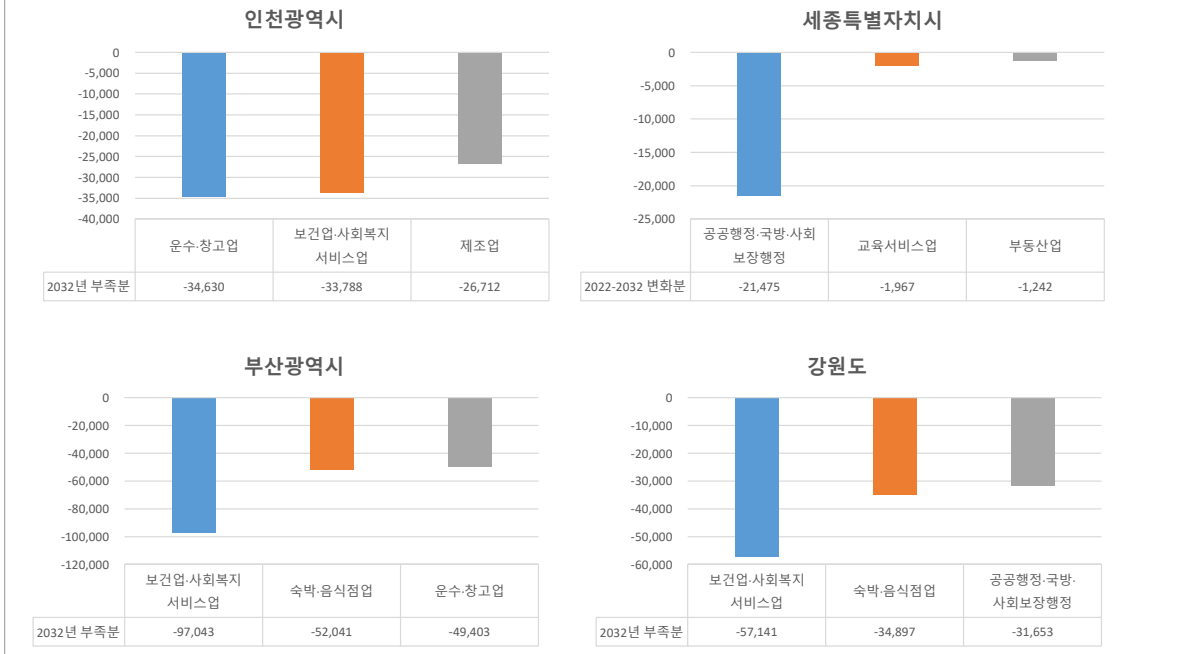
시도 및 산업별 분석 주요 결과 (2)

-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인력 부족 발생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경남(약 11만 명 부족), 울산(약 7만 명 부족), 경북(약 6만 명 부족), 대구(약 4만 명 부족), 등 동남권 지역 시도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었음.
 - 그 이외에 인천(약 3만 명 부족), 경기(약 75,000명 부족), 충북(약 4만 명 부족), 충남(약 3만 명 부족), 포함 전체 절반 시도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었음.
 - 이는 수요 증가와 공급의 감소 모두를 반영한 것
- 동남권 제조업에서의 노동인력 부족은 공급 감소에 의한 것.
 - 산업화 초기 취업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을 반영

시도 및 산업별 분석 주요 결과 (3)

항만시설 → 운수창고업

행정/군사 → 공공행정/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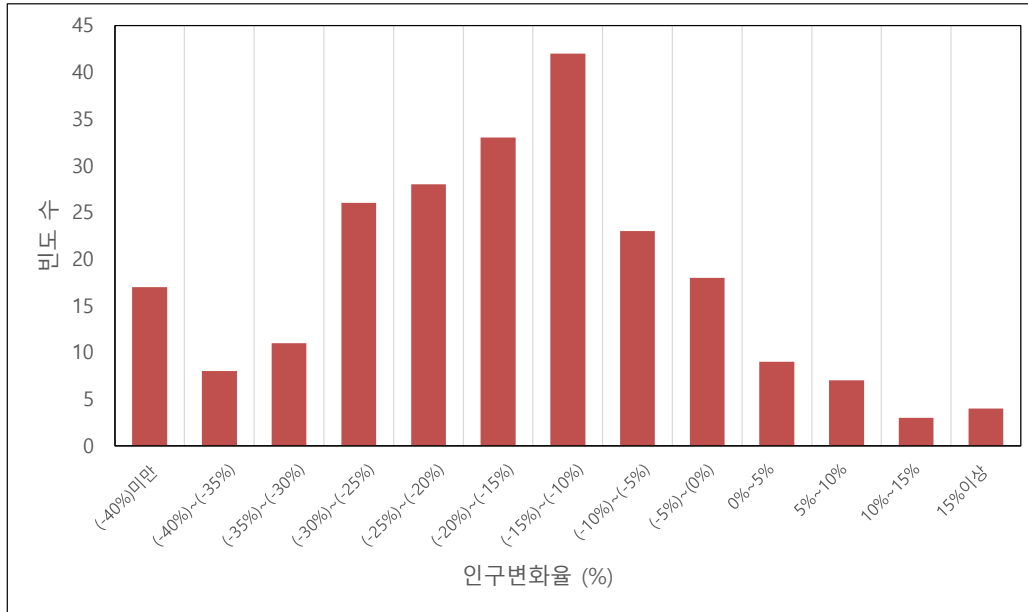


시군구 노동인구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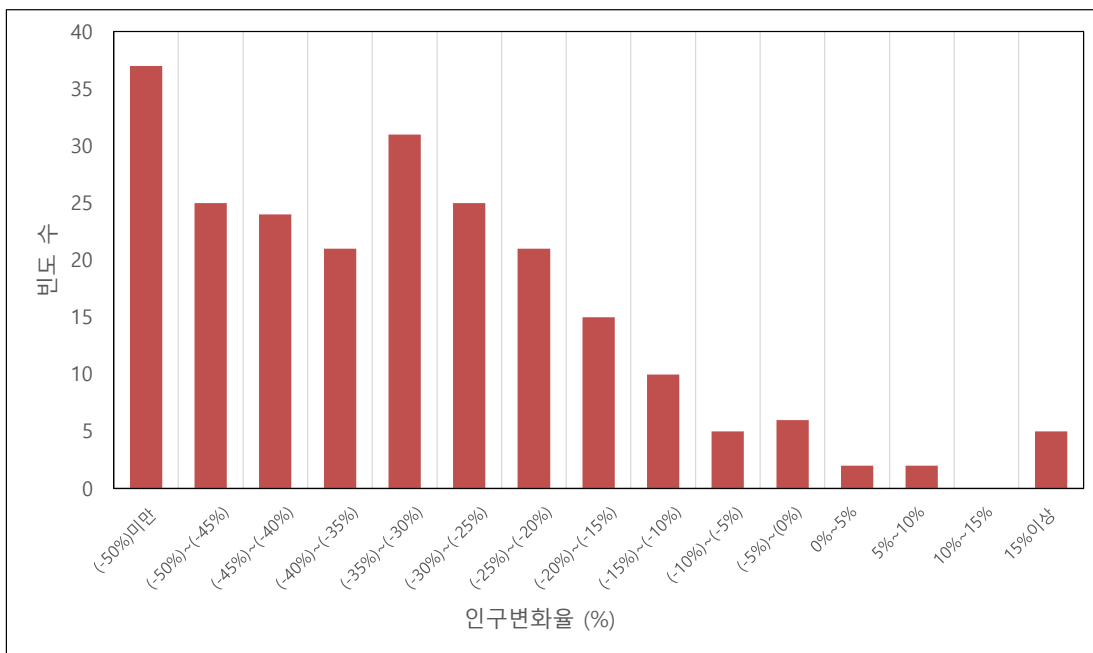
이철희·정종우(2024)

- 2022년~2042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로 인한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2017년~2022년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하여 시군구 인구동태 변수 추정: 출산, 사망, 인구 이동 등.
 - 2024년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이용된 각 시도 인구동태 변수 변화율을 해당 시도 내 시군구 인구동태 변수에 적용 → 2042년까지의 인구동태 변수 추정.
 - 각 시군구 장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 추계.
 - 2022년 시군구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유지 가정.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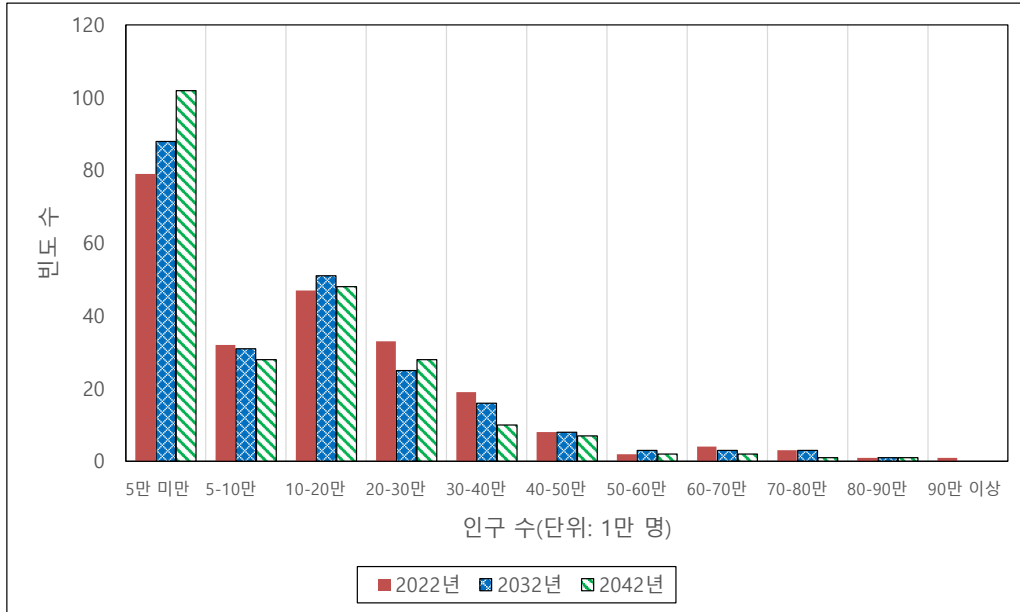
2022~203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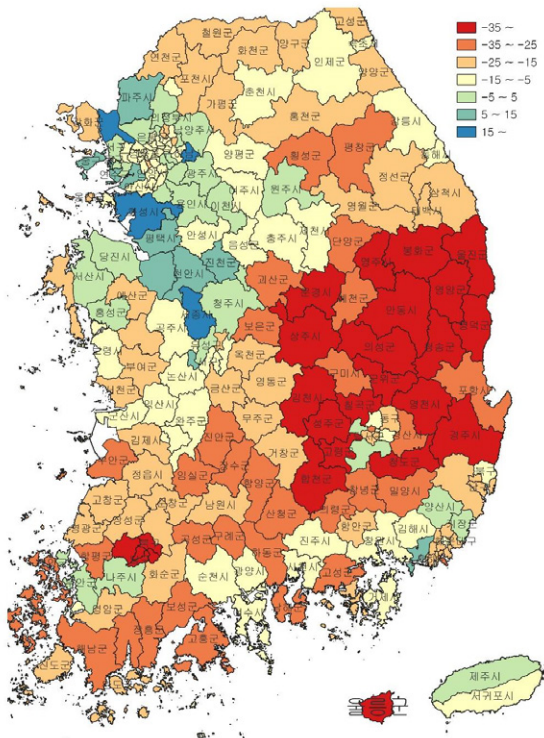
2022~204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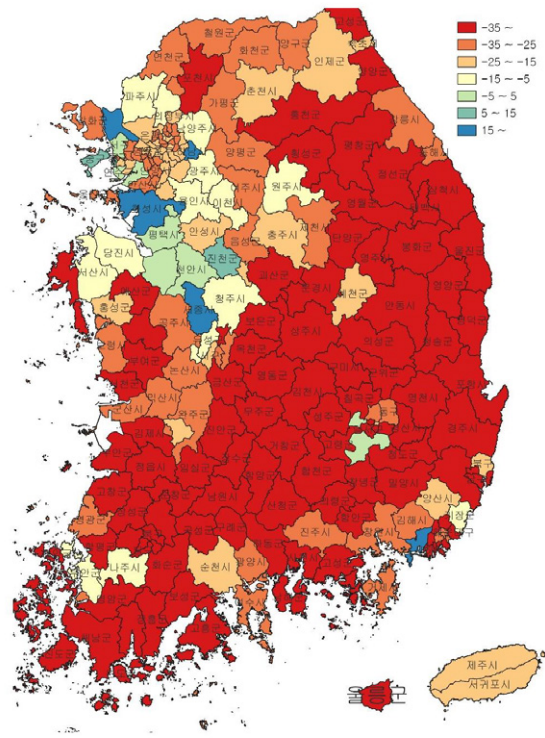
2022, 2032, 2042년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수 분포 (생산연령인구 : 15 ~ 64세인구)



2022~203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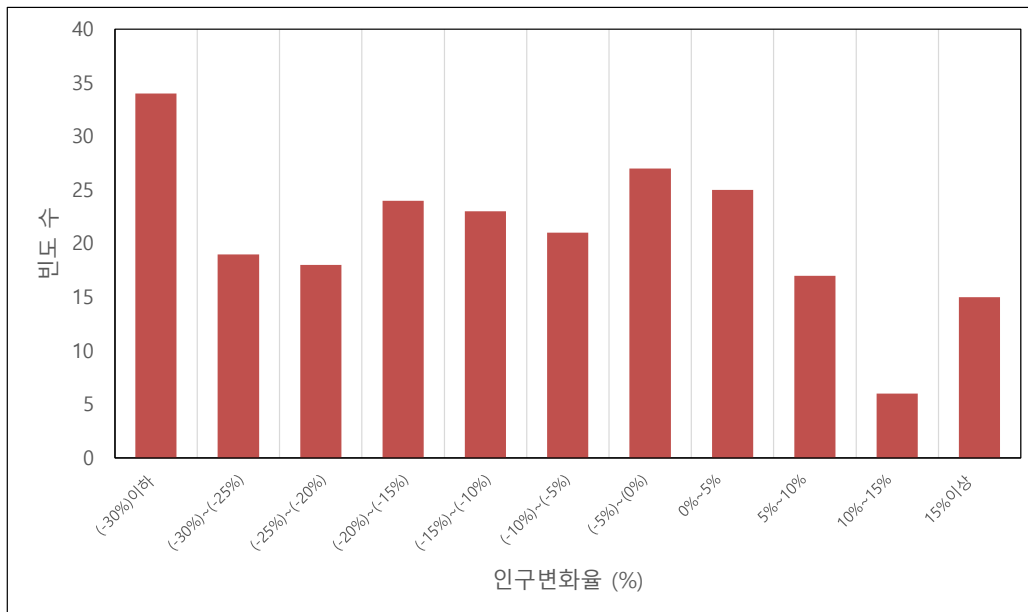
2022~204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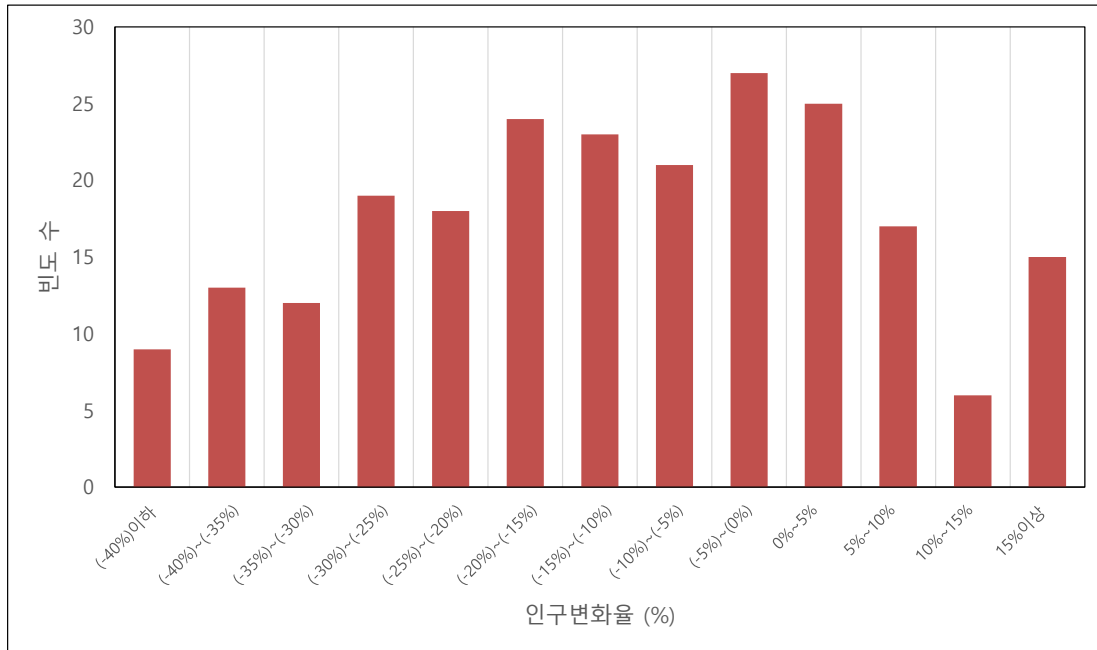
2022, 2032, 2042년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20.685	26.842	31.838
P90/P50 비율	3.517	4.022	4.380
P50/P10 비율	5.882	6.673	7.268
지니계수	0.528	0.554	0.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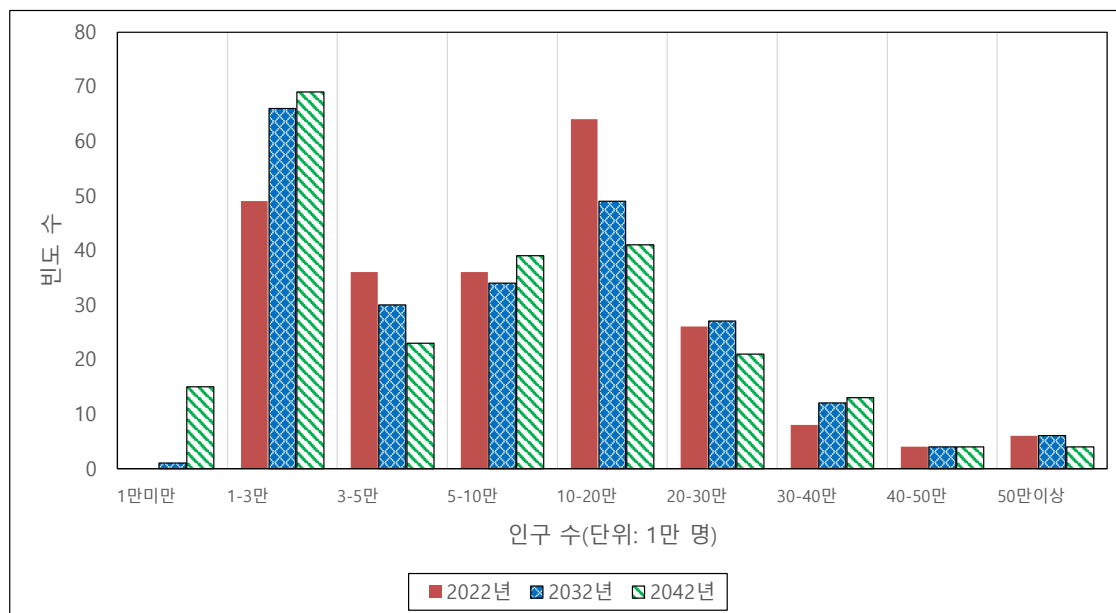
2022~203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변화율(%)



2022~204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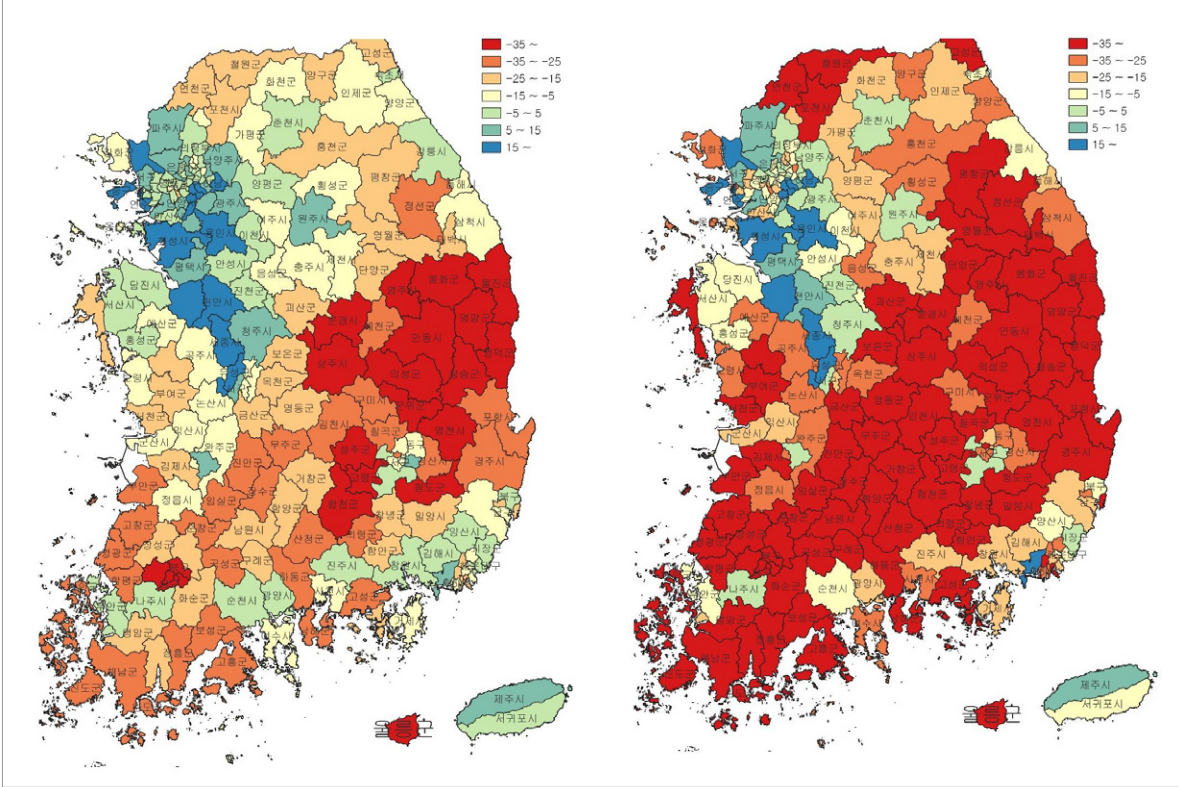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2022~203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2022~204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2022, 2032, 2042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261	26.358
P90/P50 비율	3.358	4.045	4.664
P50/P10 비율	3.994	4.762	5.652
지니계수	0.492	0.533	0.560

2042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 이후 청년층 및 장년층 시군구 간 순이동이 없는 경우

인구 불균등 지표	기본 시나리오	청년층(20~34세) 이동률 = 0	장년층(50~64세) 이동률 = 0
P90/P10 비율	26.358	24.888	27.021
P90/P50 비율	4.664	4.589	4.651
P50/P10 비율	5.652	5.423	5.810
지니계수	0.560	0.557	0.562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주요 결과

- 근래에 관찰된 인구동태 현상이 지속되고,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 가정이 실현되는 경우, 인구,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의 시군구 간 불균등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
- 시군구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나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불균등도가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주 요인은 청년 인구 이동률의 차이(이철희, 황영지 2022) → 인구 감소지역은 인구 고령화 지역과 겹침.
 - 높은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변화가 노동인력 감소 및 불균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
 -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지지함: 청년층 인구 이동은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반면, 장년층 인구 이동은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 대응 방향



기본적인 방향성

- 인구변화의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 방안 (단기 → 장기)
 - 1)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 교육훈련 개선
 - 2)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 → 이를 위해 여성, 장년,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3) 생산성 조정한 실질적인 노동투입 확대 → 이를 위해 생애에 걸친 건강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
 - 4) 인구(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 →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 지원

-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고 너그러운 노동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어떤 사회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 **사람을 보는 사회:** 나이, 성별, 출신지 등이 아닌 사람의 역량과 잠재력에 기초한 채용과 처우 → 개인의 능력, 이력에 관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 자료 구축 및 활용 지원 필요
 -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의 가진 역량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근로시간, 강도,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일자리 전환.
 - **기회를 주는 사회:** 개인의 적성과 역량과 잘 맞는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적극적인 교육/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일자리 간 매칭의 질을 개선
 -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 전환에 대응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 (1)

- 인구변화로 인한 인력 공급 노동수급 변화는 지역 및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 → 인구변화 대응 인력 정책은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
-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불균형은 13개 시도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이 대규모로 부족해지는 문제.
 - 이 부문 인력 공급 확대와 수요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과 경기에서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인력부족 발생이 예상됨.
 - 첨단 부문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변화 필요.
 - 일부 가능한 부문 및 숙련 수준(특히 내국인 고졸 인력 취업 부문)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필요.
 - 첨단부문 인력 확대에 성공해도 현 상황에서 지역 균형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함.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첨단산업 사업체 분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 (2)

-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이 지역 제조업 근로자 계속 고용 노력 확대.
 - 일자리의 질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제조업 유입을 유인.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 (3)

- 지역 간 인구이동을 포함한 인구변화가 지역 간 인구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
 - 생산연령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이미 크고 추후 매우 큰 폭으로 커질 것.
 -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인구나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적절한 노동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대응은 특정 지역 인구변화의 양상에 따라 다를 것.
 - 예컨대 청년인구 유출되고, 장년인구 유입되는 지역은 장년인구 활용을 늘리는 것이 저비용/고효율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발 제 2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최 영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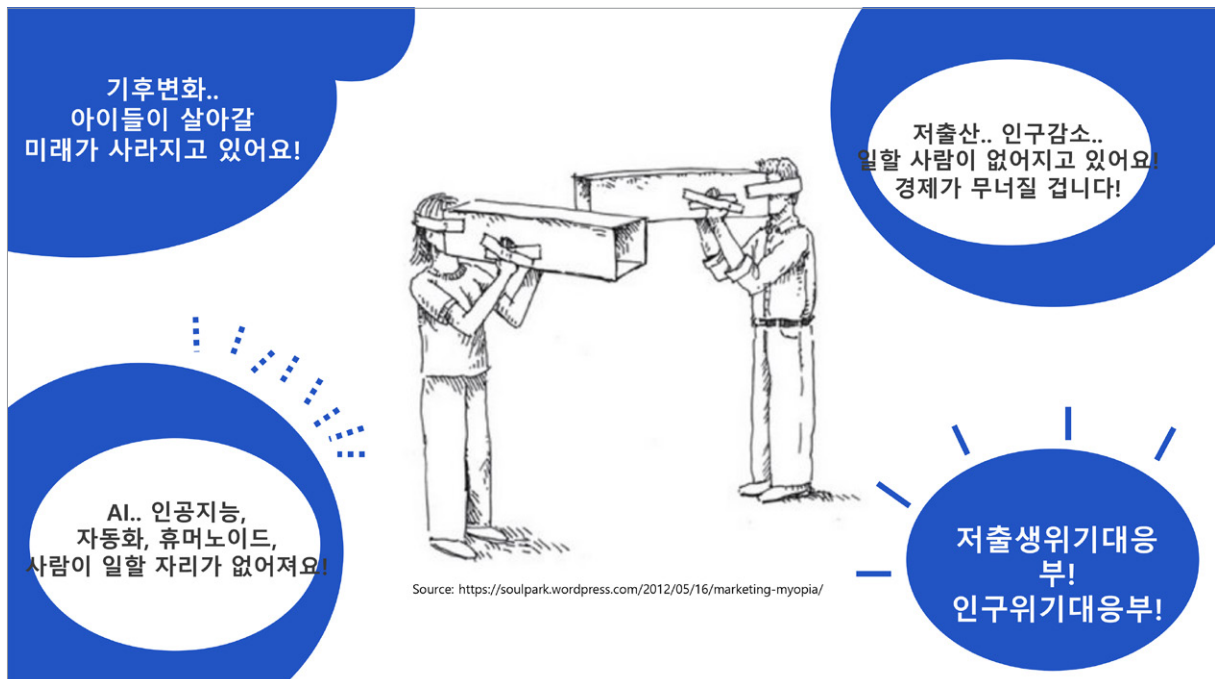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
SSK 삼중전환 시기의 저출산 대응 연구팀
최영준

삼중전환이란?

2



삼중전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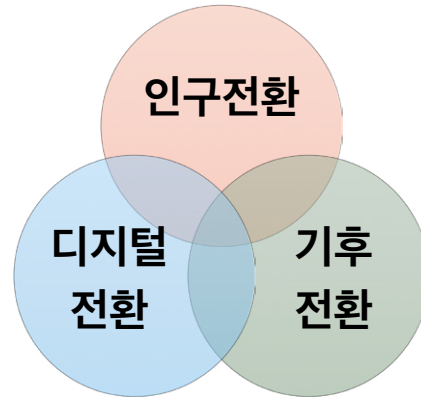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 사회경제정치 제도와 구조에 가장 핵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변화의 영역
- 인구전환(Demographic transition)+디지털전환(Digital Transition)+기후전환(Climate Transition)
- 전환(Transition): 변화(change)를 넘어,
 - 불확실하고 복합적 과정에 따른 시스템 변화
 - 단기적 변화를 넘어 중장기적 직간접 영향
 - 다수준 행위자(multi-actor)에 의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 개입

삼중전환의 국내 논의와 현실

논의의 구조



현실의 상호작용



기후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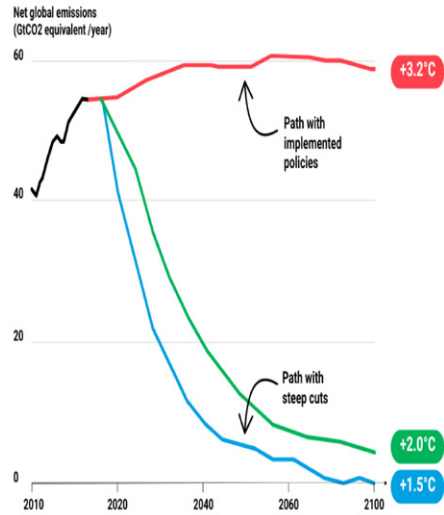
- 광의의 기후변화는 주기적으로 혹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했던 기후체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협의의 개념으로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표면온도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함
- 기후변화는 식량 및 식수 확보의 어려움, 공공 보건 및 삶의 질 악화, 주거지 및 사회 기간시설,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훼손 등의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기후전환은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적응하고 기회로 전환하려는 사회경제적 대응을 의미하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합이기도 함



기후전환

- 기후전환은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장기적 전환의 목표가 있음. 다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가, 얼마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갈 것인가, 얼마나 '정의롭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함

If we act now, steep cut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limit global warming



Source: IPCC,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A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디지털전환

- Digitization이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비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면, Digitalization은 이러한 비트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임(Reis et al., 2020)
- 협의의 디지털전환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화의 과정을 의미하지만, 광의적으로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포괄함
 - Dæhlen(2023)은 디지털전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전반의 포괄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묘사함.
 - European Union은 디지털전환을 정치, 비즈니스, 생활 습관,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지속가능성과 번영을 위해 활용하고, 시민과 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empower)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임 (Muench et al., 2022)
 - Torrent-Sellens(2024)는 디지털전환에서 신자유주의적 호모이코미쿠스에서 사회복지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하는 Transhumanism을 포함한 호모디지털리스(Homo Digitalis)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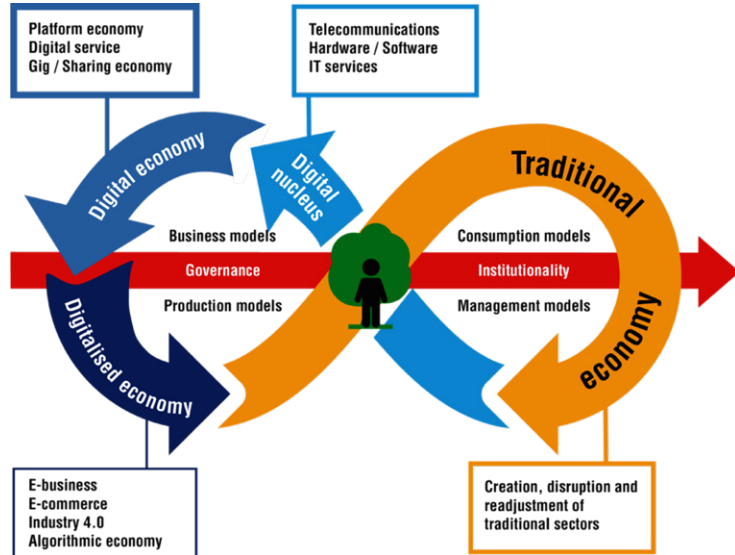
Reis, J., Amorim, M., Melão, N., Cohen, Y., & Rodrigues, M. (2020). Digitaliz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 *Proceedings on 25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Management-IJCIEM. The Next Gener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 Systems 25* (pp. 443-456).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Dæhlen, M. (2023). The Twin Transition Century: The role of digital research for a successful green transition of society?(The Guild Insight Paper No. 5).

Torrent-Sellens, J. (2024). Homo digitalis: narrative for a new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ransition. *New Political Economy*, 29(1), 125-143.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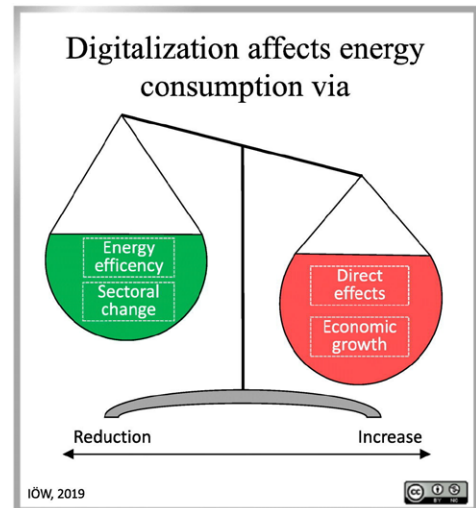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2020). *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20 Digital Transformation for Building Back Better*. OECD Publishing.



이중전환(Twin Transition)

- 디지털전환과 기후전환 간의 시너지를 목표로 한 논의
- 국가차원에서는 각 전환의 목표를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이나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s) 없이 달성하면서, 어떻게 이중전환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목표가 내포됨(Muench et al., 2022)
- 하지만, 이중전환이 실제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MUENCH, S., SALVI, M., JENSEN, K., STOERMER, E., SCAPOLO, F., & ASIKAINEN, T. (2022). *Towards a green & digital futur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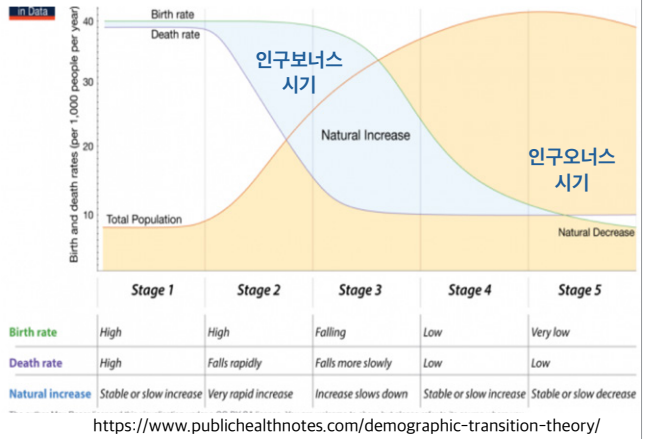


Lange, S., Pohl, J., & Santarius, T. (2020). Digitalization and energy consumption. Does ICT reduce energy demand?. *Ecological economics*, 176, 106760.

인구전환

- 협의의 인구전환은 인구변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사용됨: 사망률, 출산율, 그리고 이주민의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함 (Friedlander, 1969)
- 1차 인구 전환-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
- 2차 인구 전환- 저출산과 가족 구조 변화
- 3차 인구 전환- 이주와 다문화화
- 4차 인구전환?- 로봇화 and Transhu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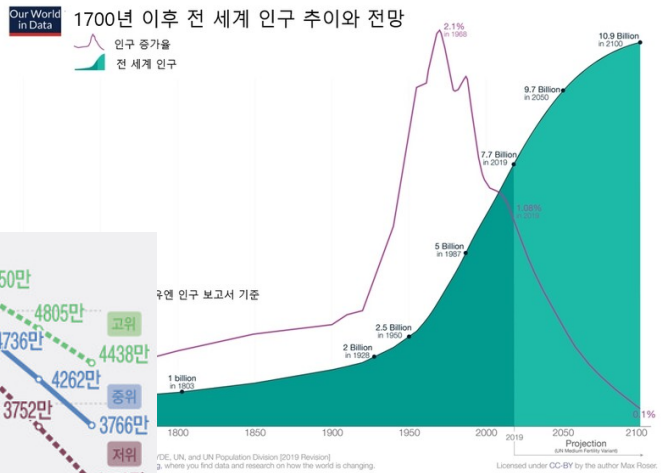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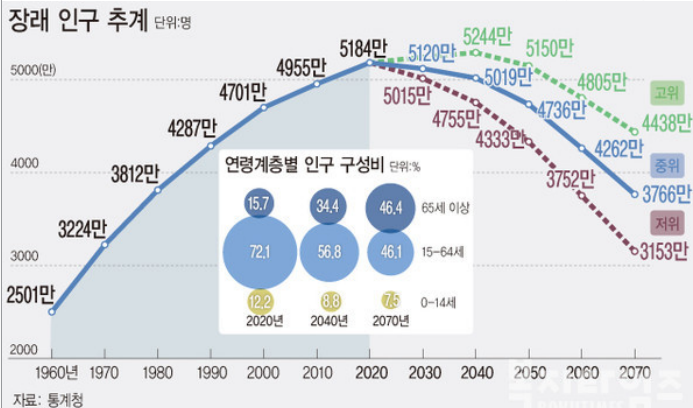
Friedlander, D. (1969). Demographic responses and population change. *Demography*, 6(4), 359-381.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철학적·사회적 운동임. 이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나노기술, 유전공학, 로봇공학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구전환

- 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67089.html>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16>

인구전환

- 인구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단순히 합계출산율의 저하를 넘어서 1) 노동력의 감소, 2) 부와 번영의 축소, 3) 노인을 비롯한 특정 인구집단의 복지감소나 근로연령대의 부담 증가가 내재하고 있음
- 인구전환을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인구 및 사회경제 그리고 정치 영향을 인지하는 동시에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인구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의도된 대응이 포함된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전환은 고용, 생산,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삼중전환이란?

- 인구전환, 디지털전환, 그리고 기후전환이 가지는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가 더 지속가능하고, 더 공평하며, 더 포용적이고,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도된 과정
- 삼중전환(Transition):
 - 개별 전환들의 독립적 현상이 아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중요
 - 국내적 관점을 넘어 국제적 관점으로 접근
 - 불확실하고 복합적 과정에 따른 시스템 변화
 - 단기적 변화를 넘어 중장기적 직간접 영향
 - 다수준 행위자(multi-actor)에 의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 개입
 - 기회를 증대시키고, 적응력을 높이며, 위험을 경감시키는 삼중전략 필요

왜 삼중전환이어야 하는가?

- 제도적 상보성: 두 개 이상의 제도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함께 작동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일컫음. 제도적 상보성은 제도 간 결합이 강화되어 높은 응집력을 이루는 상태로, 더 나은 성과를 생산함 (Hall and Gingerich, 2004)

$$R(E, E1) > R(E) \text{ and } R(E, E1) > R(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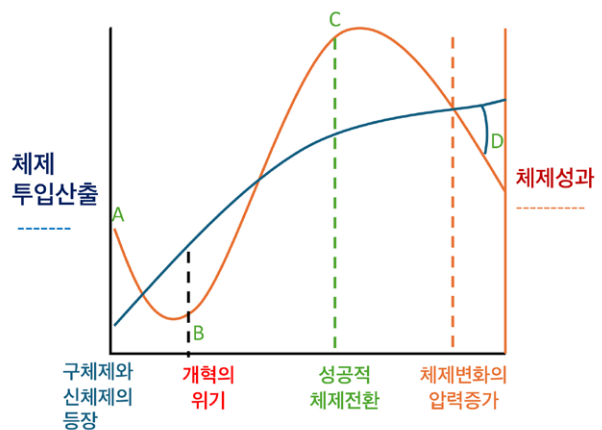
- 각각의 제도가 해외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도 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거나 실패하는지를 설명함. 단일 제도 개혁이 이러한 상보성을 형성하는 전체 시스템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Boyer, 2005)
- 하나의 영역에서의 개혁은 다른 상보적인 영역에서의 개혁과 함께 실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 개혁가들은 한 제도 개혁을 통해 즉각적 성과를 기대함. 성과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U자형 곡선을 고려하지 않음

$$R^{(t-1)}(E, E1, E2) \rightarrow R^t(F, E1, E2) < R^t(E, E1, E2) \rightarrow R^{t+1}(E, E1, E2)$$

Hall, P. A., & Gingerich, D. W. (2009). Varieties of capitalism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the political economy: An empiric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3), 449-482.
Boyer, R. (2005). Coherence, diversity,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s—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hypothesis. *Evolutionar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2, 4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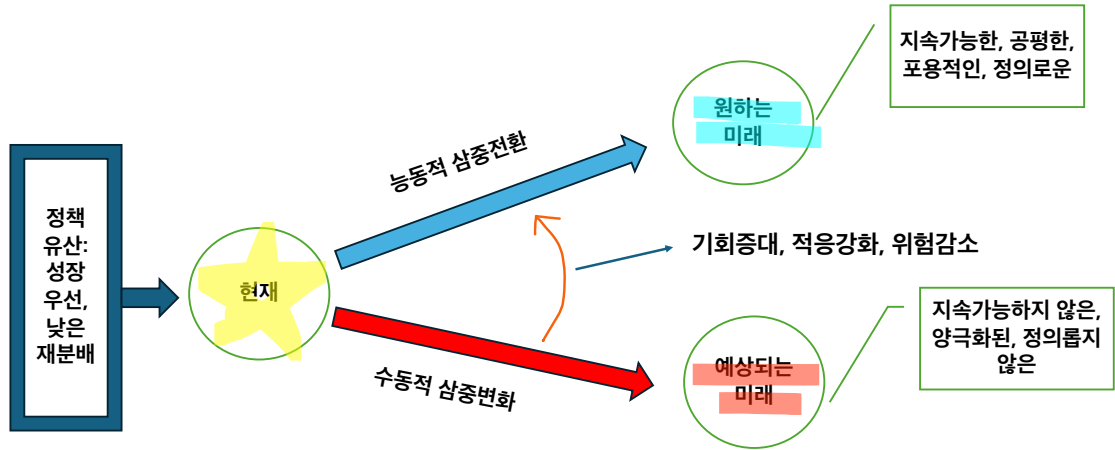
왜 삼중전환이어야 하는가?

- 계획에 의한 제도적 상보성 추진?
 - 신체제에 대한 개혁의 시작이 제도적 상보성이 낮아지면서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 있음에 대한 인지가 필요함
 - 효과적인 정치/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신뢰+체계적 정책계획은 삼중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A→C), 다시 구체제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 (B→A)



삼중전환의 목표:

Decarbonizing a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ition with Enhanced Productivity



복지국가의 대응과 변화 방향

18

• 최근 문헌에 따르면, 이미 삼중전환은 복잡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



- 01**

Risk (-)

 - Climate Anxiety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
 - Environmental degradation & climate change → 기대수명 감소, 사망률 증가, 만성질환 증가
 - 기후위기가 → outmigration

Opportunity (+)

 - 인구 감소 → 기후위기 완화 기여

- 02**

Risk (-)

 - 고령자 새로운 스킬 부족 → 불안정한 소득, 빈곤
 - 고령자 디지털 격차 심화 → 정신건강 문제 및 고립
 - AI Anxiety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
 - 모라벡의 역설 → 젊은 일자리부터 감소 → 청년 고용불안정 증가
 -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중독 증가 → 외로움/정신건강 악화

Opportunity (+)

 - 인구고령화 자체가 디지털화 촉진
 - 빅데이터 → 인구전환 문제 실시간 모니터링, 맞춤 개입
 - 제택근무 활성화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독려
 - 사회서비스의 디지털화 → 효율적 웰스케어 시스템
 -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 완화 / 여성 사회활동 참여 기여
 - 디지털 기술이 노인 고립 문제 완화

- 03**

Risk (-)

 - 실업 증가: 자동화 + Carbon Intensive work 감소
 -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가진 숙련된 인력 부족
 -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 디지털 경제, 녹색일자리(STEM) 남성 더 많이 종사할 가능성
 - 디지털 기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 → 기후위기 심화

Opportunity (+)

 - 기술발전 → 탄소배출량 감소 →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
 - 디지털화 →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 기후위기 완화
 - 새로운 일자리 창출: zero-carbon 일자리 등

삼중전환 전략: 감소, 적응, 기회

- 기후전환**
 - 감소: 제로탄소 전략: 탄소배출권, 탄소세, 규제 등
 - 적응: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토대 마련: 주거개조/보강, 재분배
 - 기회: 건강한 개인, 지속가능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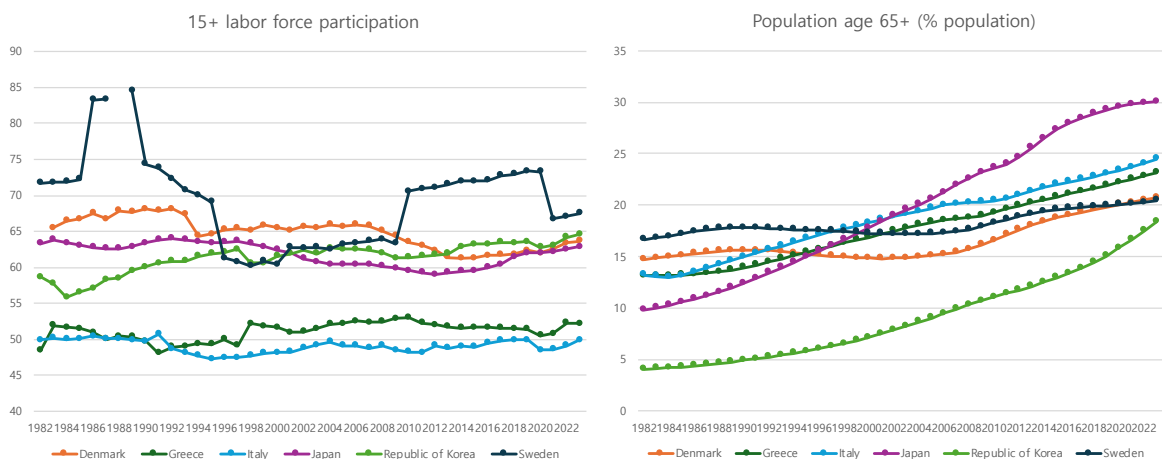
- 인구전환**
 - 감소: 인구증가 전략: 출산율 증가, 이주민 증가
 - 적응: 인구감소사회로 연착륙 전략: 고용, 생산성, 재분배
 - 기회: 더 여유로운 사회로의 전환

- 디지털전환**
 - 감소: 사회보호, 사회혁신, 새로운 고용전략
 - 적응: 사회투자 전략: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 기회: 포용적 혁신 사회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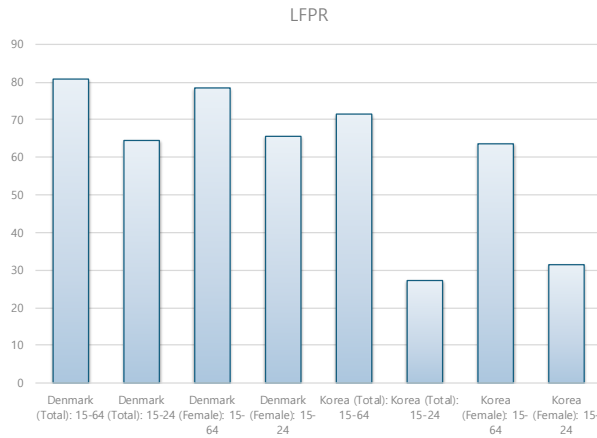
인구전환의 관점

- 인구의 ‘양’ 패러다임에서 인구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 출산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사회를 새로운 ‘노멀normal’로 받아들일 필요
- 근로연령대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
- 같은 인구 수라도 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
- 높은 사회적 자본(신뢰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각자도생을 넘어 연대와 돌봄에 적극적인 시민들
- 디지털불안(경험)과 기후불안(경험)은 출산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음

노동력과 고령화: 고령화는 노동력을 줄이는가? (ILO,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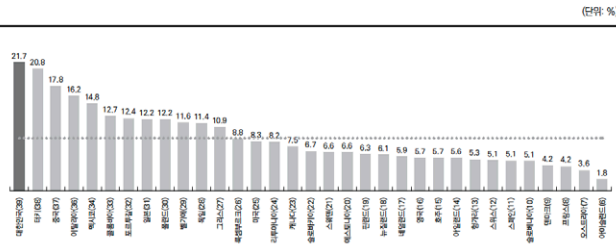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참가율 차이



- 덴마크에 비해서 낮은 청년 노동시장참가율과 낮은 여성 노동시장참가율
- 높은 학력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노동시장참가율
- 여전히 일할 역량이 있는 잠재적 인력이 있음
- 노인 참가율은 높지만, 생계형에서 역량실현형 고용으로의 이전이 필요함

← ILO, 2024

그림 6.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고립: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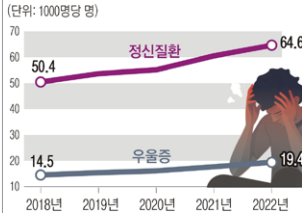


주: 근린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신지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뒤 괄호 안 수치는 순위임. 점선은 평균(9.0%)임. 자료: 갤럽,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 원자료 자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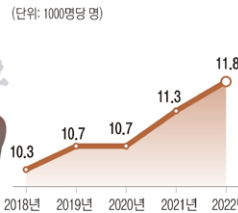
관계, 돌봄, 사회적 지지 체계의 약화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2(3), 74-86.

우울증 및 정신질환(치매 제외) 진료 인원 추이 (단위: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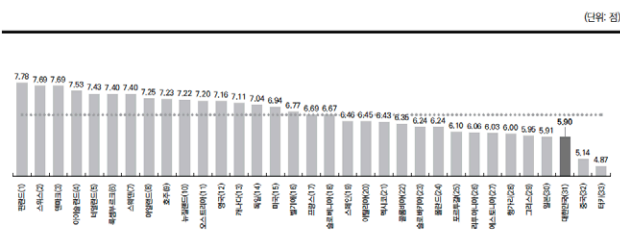
5대 중증 정신질환 진료 인원 추이 (단위: 1000명당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https://www.seoul.co.kr/news/plan/mental-health-report/2023/11/30/20231130004002>

그림 5.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 삶의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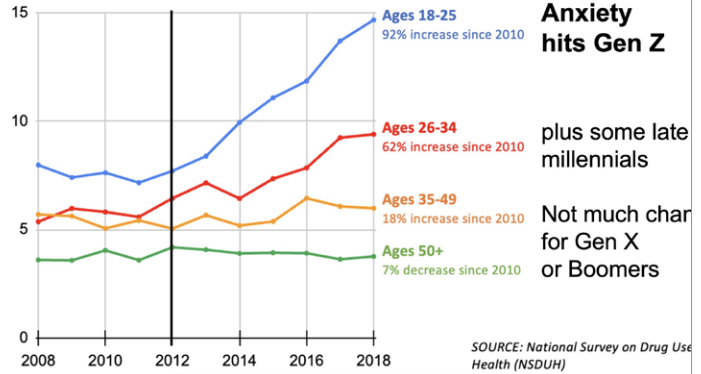


주: 겐트릴 시대의 척도(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에 의한 평균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뒤 괄호 안 수치는 순위임. 정신은 평균(6.7)점임. 자료: 갤럽, (Gallup),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 원자료 자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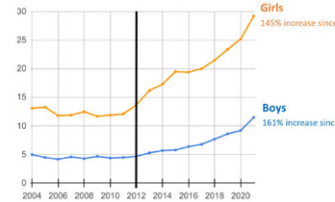
디지털화와 불안세대의 등장

- ‘불안세대’ Haidt (2024): “디지털 세계가 아동과 청년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 스마트폰과 SNS가 이들의 사회적 결핍, 수면부족, 주의집중장애, 중독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함 → 16세 이전 ‘사용금지’를 제안함
 - 미국 플로리다주 만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
- 줄어드는 아동/청년, 하지만, 노동인구의 역량 감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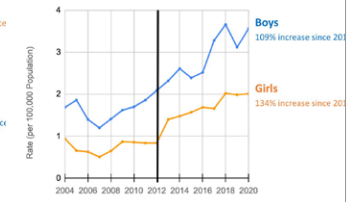
U.S. Anxiety Prevalence



% US Teens with Major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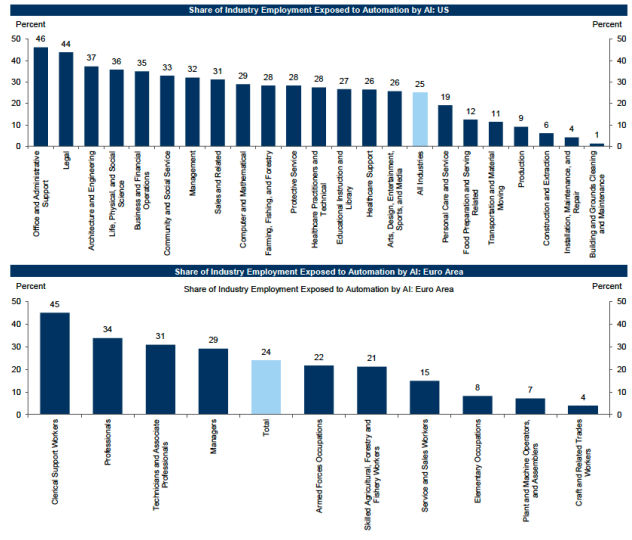
US Teens, Suicides (Ages 10 – 14)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 미국과 유럽의 직업별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일자리의 약 3분의 2가 어느 정도의 AI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성형 AI가 현재 업무의 최대 4분의 1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정치를 추정해 보면 제너레이티브 AI로 인해 3억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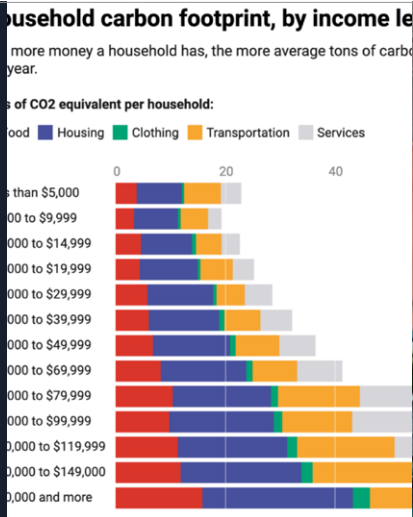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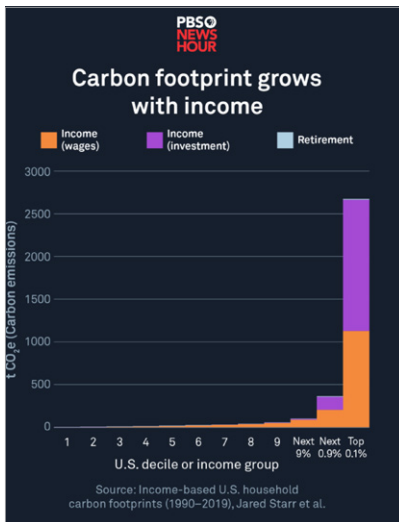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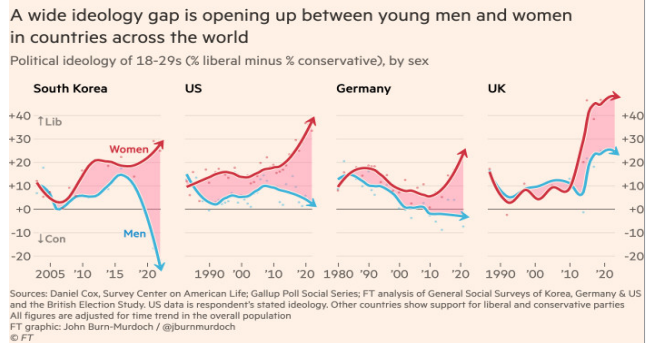
Exhibit 5: One-Fourth of Current Work Tasks Could Be Automated by AI in the US and Europe



Hatzius et al. 2023,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Economic Research. Goldman Sachs. 2023/3/26

포용적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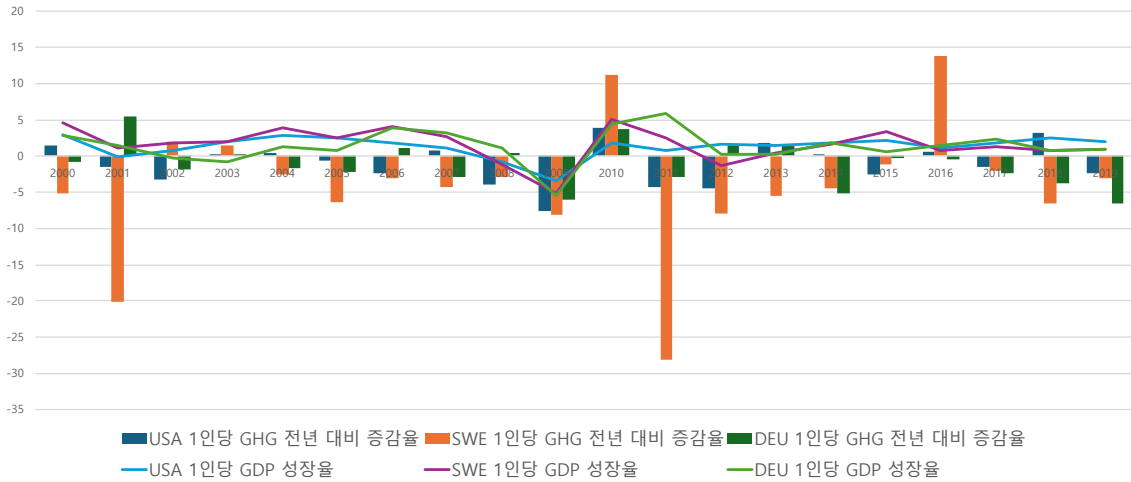
- 디지털 노동 확산
 - 노동 시공간의 재구조화, 파편화되는 노동
- 디지털 기술 디바이드
 -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소외
 - 디지털 경제로의 속도가 성인들의 디지털 습득/적응 속도보다 훨씬 빠를 우려: 상당히 많은 패자가 양산되거나 디지털화의 속도를 규제로 늦추거나
- 악순환 → 정치사회의 위기로?
 - 디지털화 → (신자유주의와 결합) → 외로움의 일반화 → 관계단절/은둔 → 정치적 성향의 극단화 그리고 사회적 신뢰/연대 약화 → 디지털 의존성 증가
 - 전체주의는 외로움을 먹고 자란다... Totalitarianism bases itself on loneliness which is amongst the most radical and desperate experiences of man (from Arendt, Hertz '고립의 시대' 2021년에서 재인용)



기후전환의 관점에서: 생산자와 피해자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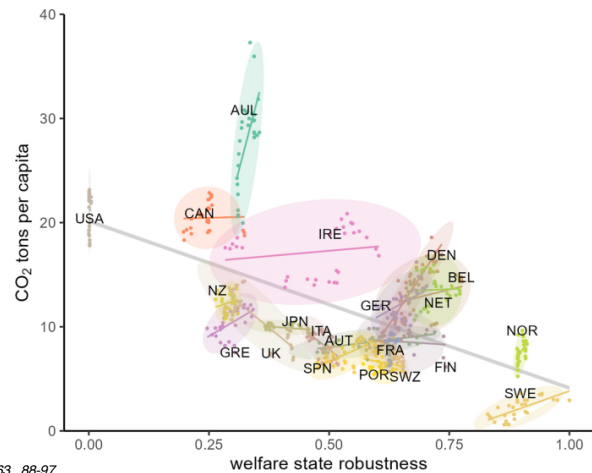
기후전환이 반드시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는다

온실가스감축율과 1인당GDP 증감율



탄소감축과 복지국가와 양립 가능한가? YES.

- 탄소세 등 기후감축이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환경국가는 복지국가와 함께 가야함(Framstad and Mark, 2019; Jagers et al., 2023)
- 환경국가와 복지국가는 상충되기보다는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 (Hasanaj, 2023; Wilder et al., 2024 → 그림)
- 예를 들어,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 투자, 유연안정성, 다당제협력을 통해서 환경-복지국가의 시너지를 이룩할 수 있었음



Fremstad, A., & Paul, M. (2019). The impact of a carbon tax on inequality. *Ecological Economics*, 163, 88-97.
 Jagers, S. C., Martinsson, J., & Matti, S. (2019). The impact of compensatory measures on public support for carbon taxation: An experimental study in Sweden. *Climate policy*, 19 (2), 147-160.
 Hasanaj, V. (2023). The shift towards an eco-welfare state: growing stronger togethe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9(1), 42-63.
 Wilder, M., Rosalle, R., & Bishop, A. (2024). Eco-welfare States and Just Transitions: A Multi-method Analysis and Research Agenda.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ility*, 1-25.

모수적 변화에서 패러다임 전환으로

- “The burnout economy: poverty and mental health” Report to the UN General Assembly (2024. 7. 11)
-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Olivier De Schutter
- 빈곤과 정신 건강 문제를 연결하는 악순환은 총 경제 생산을 늘리는 데 집착하며 경쟁과 성과를 자극하는 현재 사회의 초점으로 인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끝없는 경제 성장 추구보다 복지를 우선시할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 각자도생의 축소사회에서 연대에 기반한 생태복지국가/관계사회로의 전환

While family, careers, material well-being, friends and health are all top sources of meaning, they vary in importance across publics surveyed

Ranked choice among 17 topics coded as part of what gives people meaning in life

	1st choice	2nd	3rd	4th	5th
Australia	Family	Occupation	Friends	Material well-being	Society
New Zealand	Family	Occupation	Friends	Material well-being	Society
Sweden	Family	Occupation	Friends	Material well-being/Health	
France	Family	Occupation	Health	Material well-being	Friends
Greece	Family	Occupation	Health	Friends	Hobbies
Germany	Family	Occupation/Health		Material well-being/General Positive	
Canada	Family	Occupation	Material well-being	Friends	Society
Singapore	Family	Occupation	Society	Material well-being	Friends
Italy	Family/Occupation		Material well-being	Health	Friends
Netherlands	Family	Material well-being	Health	Friends	Occupation
Belgium	Family	Material well-being	Occupation	Health	Friends
Japan	Family	Material well-being	Occupation/Health		Hobbies
UK	Family	Friends	Hobbies	Occupation	Health
U.S.	Family	Friends	Material well-being	Occupation	Faith
Spain	Health	Material well-being	Occupation	Family	Society
South Korea	Material well-being	Health	Family	General Positive	Society/Freedom
Taiwan	Society	Material well-being	Family	Freedom	Hobbies

• 성장중심의 유산: 국가부터 개인까지

•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2021년 글로벌태도 조사, Pew Research Center

Note: Open-ended question. Rank reflects where the topic fell in a list of 17 sources of meaning that were coded. See Appendix A for mor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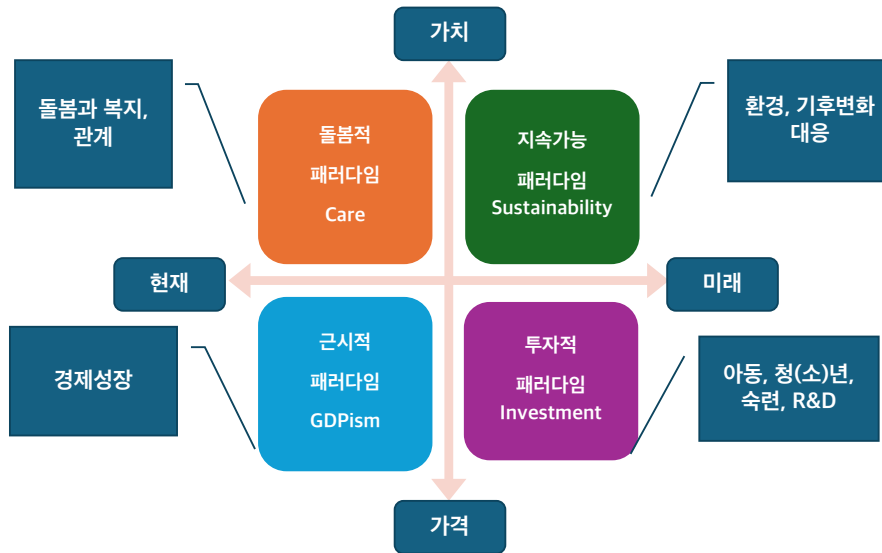
Source: Spring 2021 Global Attitudes Survey, Q36.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32

근시적 패러다임에서 균형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33

바람직한 삼중전환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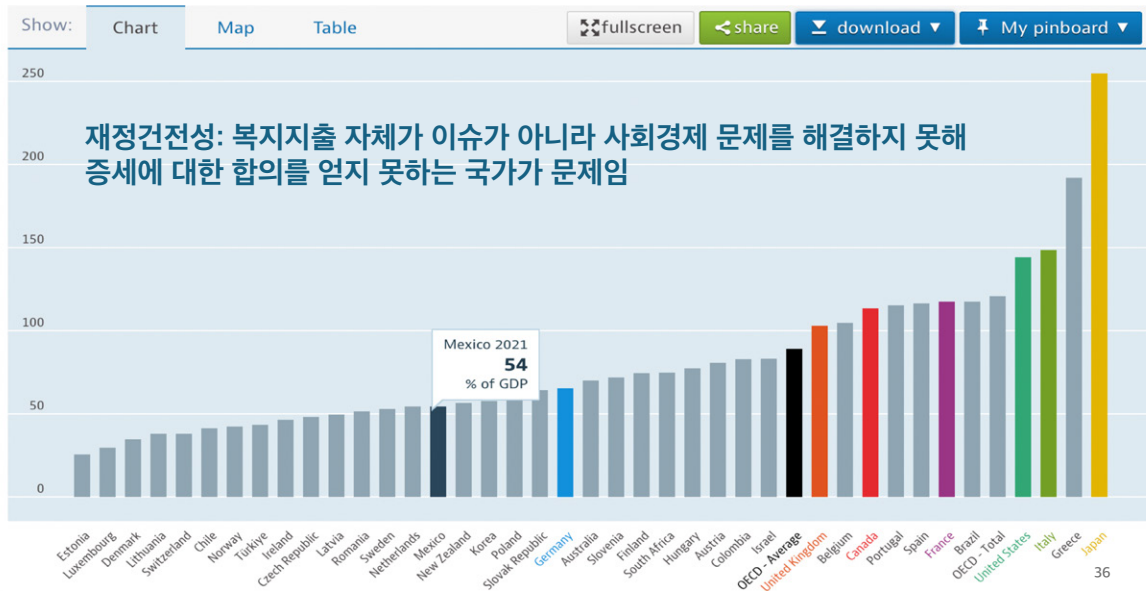
- ‘저출산위기대응부’를 넘어서 **삼중전환 국가특별위원회** 수립
 - 1) 디지털화/경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저출산에만 초점을 두는 부처를 넘어서,
 - 2) 삼중전환 시기 새로운 국가비전, 브랜드 제시,
 - 3) 제도적 상보성이 높은 전략제안 및 정치적 조정 역할 수행,
 - 4) 실질적 행정조직과 다부처 사안들을 이끌고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립,
 - 5) 모델이 될 수 있는 예는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임
- 정치-행정-기업-시민사회/노동-학계 간의 공동의 아젠더 도출, 증거 생산, 증거 해석, 정책 논의

바람직한 삼중전환을 위해서

- 전 연령대의 역량발휘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새로운 디자인
-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의 안정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며, 역량 발휘를 약화시키고, 변화/전환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킴 →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체계 수립
 - 유연불안정성 모델이 아닌 유연안정성 모델을 강화 - 포용적 디지털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 지역/공동체/시민사회를 강화하여 사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지지망을 강화시키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전략 필요
- 적극적 증세: 모든 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 → 국가-기업-개인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General government debt Total, % of GDP, 2022 or latest available

Source: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를

고립의 시대
The Lonely Century

소외와 배제, 양극화와 경지의 극단주의가 21C 고립시대의 길목을 파헤칠 수 있을까?
세계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게 될까?

김경환 옮김

공동체가 삼중전환 해법의 중심에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Das Kapital im Anthropozän

시이론, 고해이 지음
김영현 옮김

슬라보예 지젝과 마이클 하트가 극찬한 젊은 석학의 대담한 제안
자본주의에 맞서는, 파격적이고 전복적이고 섹슈얼 넘치는 책이다! — 강민준
기후 위기 시대의 당선에게 필요한 단 한 권의 책! — 김도형

일본 아사히 종합 1위! 40만 부 베스트셀러!

신시대상 2021 1위!
기노쿠니야 전편대상 2021 2위!

도이자 기념상 최우수 수상자!

폭염 사회

폭염은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에이 클라이넨베그 지음
홍경만 옮김

코로나 이년 초회복의 시작

리국환 옮김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강렬한 적 없는 내리막 시대가 시작되었다”

개헌을 위한, 자유소, 영국의 정치학, 영국군사 사령관, 대외사실, 대외사실, 대외사실...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시가고 트리본 올해의 책

전미출판협회 사회학·인문학 분야 최고의 책

영국사회학의 건강·질병 분야 최고의 책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종합토론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좌	장	김 태 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	론	정 영 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 석 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 일 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토론 1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토론 2

윤석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토 론 3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토론 4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토 론 5

홍 일 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발간일 2024년 11월
편 집 국회미래연구원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이 책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미래연구원, 2024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